

제41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 보고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 업무보고 요구의 건(추가)
-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업무보고 추가 요구의 건(추가)
-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2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3
3.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1. 업무 보고	8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5
4. 업무보고 추가 요구의 건	26
5.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26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여야가 함께 참석한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불출석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염숙히 선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허점에 기대어서 국회 출석 의무를 무시한 것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부처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자리가 빈 좌석인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참 영망일 텐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한 행안부장관이라는 부처도 국회에 불출석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을 외치고 실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그리고 김조일 소방청차장, 이 5명에 대해서는 중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시)05분)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간사님 외 1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추가로 실시해서 불출석한 기관의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77조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업무보고 대상은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4개 기관으로 업무보고 일시는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일 업무보고와 달리 각 부처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기관별 업무현황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은 총 5명으로서 각 부처 기관장 4명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정년퇴직일을 고려해서 김조일 소방청차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대신 이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견은 아니신데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용혜인 위원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취지기는 한데요 이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좀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송 참사가 이제 일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15일이 오송 참사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책 마련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행안위도 지난 7월 15일 참사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현안질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일반증인으로 국감에서 채택해서 질의 한번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진상 규명을 해야 온전한 재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 점점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에 경북 북부에 1년 내릴 강우량의 4분의 1이 쏟아져서 2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채 상병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바로 그 폭우가 이 폭우입니다.

올여름은 더욱더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태풍이 50% 이상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극한의 폭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후 재난의 시대에 언제든지 다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와 또 행안부가 힘을 합쳐서 재난 대응의 과정, 그 준비 상황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안부를 포함한 행안위 소관 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참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재난안전의 담당 부처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상임위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고요. 재난대응 점검의 골든타임을 이렇게 업무보고 거부,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놓치게 된다면 그래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채택할 예정인데 중인으로 채택하고 그래도 그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강제 구인과 위원회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재난방지책도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우리 행안위의 주요한 과제로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 방침을 밝혔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함께 행안위에서 만큼은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빠르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윤건영 간사님께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우선 용혜인 위원님 말씀 중에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행명령은 지금 현재의 회의 절차상 조금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이 절차가 끝나면 다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가장 강력한 고발 조치 등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송 참사 국정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후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국무위원들이 중인 채택을 통해서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는 지금의 현실에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입니다.

오늘도 정부 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지적했듯이 국회 보이콧은 민생 보이콧입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모두 포기한 행위이자 야당에 압도적 다수를 주신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무엇입니까? ‘독선·오만·불통·무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물가는 OECD 평균의 1.6배가 넘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작년에만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니 집권 여당도 집단적으로 보이콧하며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불출석한 기관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와 함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장 민생 보이콧을 중단하십시오.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제 국민의 눈치 좀 보십시오. 또다시 민생을 포기한 정당으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기 전에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의 채현일입니다.

오늘 행안부장관이 출석했으면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서 의사 진행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시의 TBS 사태 관련입니다.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가 폐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갑작스러운 조례 폐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위기에 봉착을 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예고되면서 25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잊게 생겼습니다. 또한 경영개선과 민영화를 잘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속은 하나 마나한 약속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행안위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7월 2일 행안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행안부장관께 정확한 입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 협안보고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모경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빈 좌석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선관위와 진화위에서, 두 기관이 참석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부처들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님, 경찰청 윤희근 청장님, 소방청 남화영 청장님,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꼭 뵙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난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용산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 그 어떤 상임위 못지않게 정말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계시고 그런데 법이 미비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보상 기준도 다르고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본 위원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관 상임위 바로 행안위입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일주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장마는 벌써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의 182개 지하차도가 침수될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9개의 지하차도는 제대로 된 진입 통제 기준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통한 보완이 시급함에도 이 자리에는 담당 부처도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위원도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복귀하셔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 마지막으로 한 분만……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금일 전체회의에 네 분의 기관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것으로 현정 사상 처음입니다. 행정부마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여든 야든 이유야 어쨌든 행정부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현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혹시 이번 지진이 진도 4.8에 불과한 것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지진이 더 발생

할 수도 있다.

연구기관에서도 한반도에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국민은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안 지진이 속한 단층이 어느 단층대이고 최근에 어떤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10억만 달랑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 설명이나 절차 없이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장관의 쌈짓돈이고 우리 국회는 들려리인 것입니까? 돈도 돈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지진으로 호남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국 단층 조사에서 호남을 조사하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장관이 꼭 출석해야 됩니다.

오늘 행안부장관의 불출석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챔버리 사태 등 수많은 참사와 재난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인식이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기관보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업무보고, 저는 초선이니까 대단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제 앞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를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꽉꽉해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중채무자는 지난 2월 45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안 나타나시니까 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재작년에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은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작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며칠 전인 12일 전북 부안에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원회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을 심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행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들을 추진하기를 국민의힘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리에 없지만 방송으로는 보고 있겠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제가 듣기로 업무보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는 국민의힘의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좀 견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 출석을 위해서 중인 출석 요구 등 아까 국회법에 정해진 수단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요.

더불어 오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특위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아주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관리하고 또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라는 것, 그리고 그 위원회라는 것, 우리들이 더 심각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부 부처에 강력히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번 의사진행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128조 제1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129조 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중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라. 인사혁신처
- 마. 경찰청
- 바. 소방청

(15시 28분)

○ 위원장 신정훈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순으로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기획조정실장과 사무처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옥남 상임위원이 대신 배석하셨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빈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및 정당, 정치자금사무 등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관리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규 운용으로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고 선거·정치제도 연구의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선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 지원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행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을 면밀히 진단·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게 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린 자세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물론 국회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 사무처장입니다.

임정수 감사관입니다.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광호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조동진 대변인입니다.

김인수 기획국장입니다.

김수연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윤재수 선거1국장입니다.

황윤선 선거2국장입니다.

김범진 법제국장입니다.

최희영 조사국장입니다.

김대일 선거연수원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규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상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52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553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속기관으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페이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원은 2만 3479명입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사무처는 중앙은 3실·관, 8국·원, 26개 과, 시도는 4개 과, 구·시·군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982명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임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관리,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투표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관리,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선거·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일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0일

까지 총 14일간이었습니다. 선거인 수는 인구수 대비 86.3%인 4428만여 명입니다. 후보자는 254개 지역구에서 699명,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에서 254명이 등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선거벽보는 8만 3000여 곳에 23만여 매를 첨부하였고 2402만여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습니다. 투표소는 1만 4259개, 사전투표소는 3565개가 설치되었고 최종 투표율은 67%였습니다.

개표결과 당선자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1명, 국민의힘 90명,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각 1명씩이며, 비례대표는 개혁신당 2명, 더불어민주연합 14명, 국민의미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선거관리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의제고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를 투표소로 우선 확보하고 투표 편의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모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와 투·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수검표 등 달라진 투·개표 절차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참여형 이벤트, 매체를 활용한 유권자 맞춤형 홍보로 투표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관리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추가 투표소 운영 등 투표소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당·후보자의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약이슈트리'를 공개하여 정책·공약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당내경선을 위탁관리·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규 운용을 위해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통일적으로 법규를 운용하고 의정지원 확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법규정보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정치관계법 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기별·사안별로 사례 중심의 사전안내를 우선으로 하되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였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 등장에 따른 딥페이크영상 등 새로운 선거운동의 변화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52억 8038만 원, 지역구는 평균 2억 1864만 원이며 지난 6월 7일 비례대표 4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 513명에게 총 956억 62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청구내역과 정당·후보자의 회계

보고내역을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확인·조사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이의신청·반론보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의·조치하였습니다.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의 정견·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 비교·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심의·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유권자의 많은 참여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고 투표율 또한 3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리입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로 10월 16일 실시되고 후보자 등록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개시됩니다. 현재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및 곡성군수 등 3개의 기초단체장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농협중앙회장선거 등 총 14건의 위탁선거를 공직선거 수준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였으며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2건은 종결되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5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영역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정당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정당운영과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대표 경선 등에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정당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회의 업무 지원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기부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원회 지정권자가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후원회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액 다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선거·정치제도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연구를 내실화하고 연구네트워크에 기반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내외 선거제도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제도연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투·개표 등 선거사무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효과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조직 혁신입니다.

먼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심의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제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인사·보안 감사를 포함하는 등 감사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위원회 조직 및 인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조직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정에 필요한 인사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위원회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서버 등 전산장비 성능 보강으로 선거정보인프라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선거정보 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선거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보안컨설팅 등을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안정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최신 암호화된 체계를 적용하여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대국민 선거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인력, 인프라 등 관계체계를 내실화하고 통합보안관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옥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옥남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김광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진실·화해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사건, 한국전쟁 피해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6일로 조사 기간 1여 년을 앞둔 2024년 5월 말 현재, 접수된 2만 245건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 중 진실규명 결정 6446건을 포함한 1만 237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나머지 7875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피해자를 위한 예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고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인력에 비해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오랜 기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남아 있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년 혹은 100년이 지난 과거 사건들을 대하는 것은 벼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과거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화해와 통합된 미래를 함께하는 지난하고도 숭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간절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입니다.

정영훈 조사2국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보고는 송상교 사무처장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상교 사무처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업무현황을 제출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진실규명 조사현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에 출범하였고 최초 조사 개시일인 2021년 5월 27일로부터 내년, 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15의거 진상규명입니다.

2쪽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위원회는 사무처 아래 1관 2국, 2담당관 8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9명, 현원은 227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 관련, 2024년 예산은 총 168억 원으로 인건비 65억 원, 기본경비 68억 원, 사업비 3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건 처리·접수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진실규명 조사 신청 건수는 총 2만 245건이고 그중 진실규명 6446건 및 조사 불능·각하 등 5924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만 2370건을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305건입니다.

5쪽 이하에서는 진실규명 조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총 배정 사건 1만 4059건 중에서 4796건을 진실규명하였습니다. 그간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세부 내역은 5쪽 이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538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042건에 대한 조사와 전남 신안 희생사건,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 등 직권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조작의혹·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현황입니다.

인권침해사건은 동일한 시설·단체에서 발생한 단체사건과 개별적인 사건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236건이 배정되어 있고 그중 1263건을 진실규명하였으며 1402건이 조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간 진실규명을 한 주요 인권침해사건으로는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강제

징집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항일독립운동입니다.

130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간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96건이 조사 후 종결되었으며 34건이 조사 진행 중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15의거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3·15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493건을 배정받아서 344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였고 131건을 조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은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사건을 차질 없이 조사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보고에 기재된 몇 가지 중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적극 협의 및 입법입니다.

그간 진실규명 후에 피해구제의 공백과 피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배·보상법의 마련 그리고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등의 법률 근거 마련 등 많은 입법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 10여 개가 입법 또는 발의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배·보상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입법을 위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입니다.

유해발굴 사업은 그간 위원회의 직접사업과 자자체에서 하는 발굴사업이 보조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아울러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체 수집 및 유전자 감식 작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쪽, 마지막 과제로 화해 모델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거사재단 설립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 계획안 마련 및 위원회 종료 이전 공청회 개최, 입법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몇 가지 좀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인 학살 유족단체로부터 상임위원님도 고발당하셨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예.

○**김성희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 발표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화위의 조사·운영을 규정하는 기본법 하위규칙에 보면 신청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결정, 의결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용어…… 언론에서는 진실규명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조사를 하였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위원회에 심의 의결 전이 올라오면 여러 위원들께서 사건의 실체라든지 희생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십니다. 의견을 주시고 또 일부 오탈자를 비롯한,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요.

함평 사건의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그 사건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논의 과정 중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사건의 전형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는 전형적인 사건과는 다르다, 함평 신광면 일대가 불갑산과 군유산 일대인데 그 사건의 정황이나 여러 가지 그걸 보면 군경에 의한 희생이라고는 보기 힘든 정황이 있으니 좀 확인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 전체회의 의결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관련 담당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확인 결과 원래 조사 내용과 변함이 없어서 확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후에 신청자들께 결정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김성희 위원** 보통 같은 경우에, 지금 진화위에서 주신 의결 건 현황을 보면 2023년 11월 28일에 67차를 했을 때 그 의결에 대해서 다 12월 21일, 2023년 12월 달에 다 결정을 했는데 오로지 이 건에 대해서만 24년 2월에 늦춰서 했단 말이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즉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그게 위원님, 통상 저희가 규정대로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는 일부는 보완을 하고 일부는 또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재빠른 신속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신청인들께 결정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사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의결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신청이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라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시 저희가, 그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지만 위원장 이외의 비상임 위원들께서 정황을 좀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김성희 위원 예, 회의록 말씀 잘 주셨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면 되니까 좀 상세한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예,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성희 위원 진실·화해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표류하는 이유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홈페이지에 가서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국가의 폭력,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밝혀내고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옥남 상임 위원님 직접하신 말씀에서 진화위 2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서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부역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진화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위원님, 그 발언도 제가 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부역자를 가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 김성희 위원 아, 그런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예.

○ 김성희 위원 김광동 위원장은 지금 부역자는 학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진화위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약간의 좀 왜곡, 과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 김성희 위원 그러면 부역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희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예, 제가 제 발언을 다시 한번 그 워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러한 취지로……

○ 김성희 위원 이거 보도가 됐던 내용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아니요. 제가 그……

○ 김성희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아니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예, 취지가 아니었고요. 저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을 결정하는, 진실규명을 하는 기관이고……

○ 김성희 위원 그래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 위원 이옥남 또 희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서, 희생 경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50년 9·28 수복 이후에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전라도 서남부 지역이라든지 군경 토벌 과정이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예.

○**김성희 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님 나오셨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김성희 위원** 잠깐 말씀 좀 들어 볼까요?

지금 황인수 조사1국장님 언론의 보도 내용이라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해당 사자의 의견만으로 역사를 쓸 수 있느냐, 간첩 행위를 한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데 살인 인정을 하겠느냐, 역사는 팩트대로 기록해야 된다, 북한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고 보고서를 쓰도록 하라’라는 취지로 조사관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법에 따라서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고 화해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민족 정통성을 밝히고 국민 화합으로 가는 겁니다. 미래로 가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취지로……

○**김성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그런 취지로 제가 일부를 했고……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김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자, 마스크를 좀 벗고 발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 건 좀 계속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개인적인 사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저분이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프로필 사진에 보면 안경이 없는 데 지금 안경까지 착용을 하고 마스크를 쓴 게 본인 신분 노출에 대한 혹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저를 도와줬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신 분이, 그렇게 국정원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 공무원을 하시는 건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김성희 위원** 본인이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지점인데요. 본인이 아직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요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와서 지금 부역자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

지금 상임위원님 말씀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의 조사국장님 말씀 들으면…… 상임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건에 대해서? 그 말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조사1국장의 경우에 전직 직장에서 했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사1국장이……

○**이해식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정춘생 위원**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지요?

○**이광희 위원** 조사1국장 하지 마셨어야지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희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 또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김성희 위원**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들어서요. 답변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신정훈** 예, 답변까지.

○**김성희 위원** 부역자를 찾는 것이 진화위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1국장님의 언론보도의 발언들을 보면 간첩인지 식별해야 된다, 가해자는 북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위원님, 오해십니다. 저희가 실제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지는 제가 언론보도가 위낙 많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제가 조사1국장과 일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인식이나 취지로 조사를 지휘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일어서 주시고요.

지금 발언자가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들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건 대단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와 또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상을 비롯해서 업무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마스크 쓰고 또 복면하고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야 될 처지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하고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저는 제 업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제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정훈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위원님들께서 여쭈시는 대로 다 대답할 수 있고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에 관련된 일은 그건 또 별도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조사1국장께서 채용되기 전에 제가 진화위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정원 3급 고위 직원이 조사1국장으로 채용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똑바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합격을 시켰고…… 언제 임용이 됐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저 9월 달에……

○이해식 위원 9월 달에, 작년 9월 달이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제가 6월 달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제가 6월 달에 면접을 봤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6월 말이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격 통지를 받은 게 6월 말일 거예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임용이 됐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때 이미 우려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국정원은 방첩대잖아요, 그 전신이. 그렇잖아요? 진화위의 진상규명 대상자들의,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가해 기관인 거예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아니, 저는 6·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원이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그런 가해 기관의 고위직 직원이 조사국장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고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하는데 지금 국정원 요원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진화위 조사1국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요 저는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안경 쓰고 마스크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게 어떤 어디에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앞에 답변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계속 웃고 진중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 답변 태도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스크 착용 문제나 안경 착용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만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질문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진화위에서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위원장에게, 보고를 받는 기관의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불손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어디 있겠어요? 국회 국정감사든지 아니면 상임위 현안질의든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해 주라고 하지. 공개적인 자리에 비공개로 자기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아니라 복면이잖아요, 복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다, 안경 쓰고. 대단히 오만불손하고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보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사전에,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런 자세도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법률적인 지식이 짧아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질문을 계속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수 조사1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국정원법 이걸 다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지금 조사1국장이 단상에서 본인의 신분을 이유로 해서 마스크를 그리고 안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법 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신 황인수 조사1국장이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배석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본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근거를 공무원법, 국회법 그리고 국정원법,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위원장 신정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장은 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공개로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 업무와 관련해서 비공개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정원법에도 국회법에도 국가공무원법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행동을 지금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장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우선 본인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작년에도 국감 때 이런 복장과 이런 마스크와 안경을 끼고 출석을 했었고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전혀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정되는 걸로 생각했었고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상……

○**용혜인 위원**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광희 위원** 법 위에 군림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저는 저 말고 다른 한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위원을 하면 안 되시는 거지. 지금 법보다 위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아닙니다. 저는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데요.

마지막으로 진화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이옥남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옥남 상임위원께서 참조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우선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의 발언대로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직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장의 사유를 들어 보면, 물론 당연히 법적인 근거를 존중해야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전직 직장에서 국장 본인이 아니라 그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신변이 다 드러날 경우에 제삼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점,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러한 점을 좀……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김성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치는 건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분이 안경 안 쓰시는 것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진실·화해위원회 출석 명단에 ‘조사1국장(별정직 고위나급) 황인수(1968. 8. 2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 위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해서 맨얼굴 사진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감춰야 될 분 같으면 여기도 마스크를 써워서 사진을 찍으셨어야지요. 이렇게 다 공개되어서, 공개 채용한 사람이 갑자기 이 자리에 서면 비공개를 해야 된다? 뭘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신분이 감춰져 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직접 작성해 오신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위원회 서류에 맨얼굴이 다 드러난 상태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서 있을 때만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저희 간부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행안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자료로……

○**용혜인 위원** 이게 왜 비공개 자료예요?

○**김성희 위원** 저희 공개 회의하고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옥남** 아니, 그런데 이 자료 자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상임위원님 그리고 조사1국장 여전히…… 상임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기관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야 될 분이 법적 규정은 무시하고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미 공개된 자료 이것을 무슨 비공개로 제출했다, 비공개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조사1국장의 마스크와 안경을 벗을 것을 명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

○**위원장 신정훈**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양해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해식 위원** 그러면 조사국장을 그만둬야지요. 그만둬야지, 조사국장을. 말이 됩니까, 지금?

○**용혜인 위원**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정훈** 회의가 계속되고 또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명하겠습니다.

지금 진화위 조사1국장 황인수 국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계속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 앞에 또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 다시 한번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

고 답변해 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제가 입사하자마자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요청서를 제가 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인, 공개적인 활동은 다 참여하면서 제 초상권에 관해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위원회에다 한 거지, 국회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춘생 위원** 조사1국장,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퇴거시키지요, 나가라고.

○**용혜인 위원** 초상권이 어디 있어요?

○**윤건영 위원**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춘생 위원** 진화위가 비공개 조직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답변석에 나와 있는 황인수 조사1국장의 퇴거를 명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한 사람이므로 이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정원법을 보더라도 직원은 재직 중에,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지, 국회에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법률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증인의 태도와 자세도 아주 크게 문제가 있고요. 대답을 할 때 마스크와 안경,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국정원 요원이라면 고도의 절제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람일 텐데 이 자리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편향된 사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또 오늘 나타났지만 이분은 조사1국장으로 임명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국장으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던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데요. 저희들이 7월 2일 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39분)

○**위원장 신정훈**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7월 2일 화요일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 추가 요구의 건

5.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추가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업무보고 추가 대상기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하고 2024년 7월 2일 화요일 10시에 열리는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증인은 총 3명으로서 김광동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 그리고 황인수 조사1국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추가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다음은 국회법 129조 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 위원장 신정훈 예.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훈 정말 황당한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국장도 국장이지만 저는 상임위원의 태도가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기관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사국장이라는 업무가 비공개 업무가 아니고 대민을 상대하는 업무인데 그 대민을 상대하는 업무에 관련되어서 얼굴도 드러나지 않게 활동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고 있는 위원회 태도의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위원들에게 기관 경고를 위원회 차원에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관에 대한 경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7월 2일 날 회의 때는 관련되어진 기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사전에 서면으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사님과 협의해 가지고 가장 강도 높은 유감과 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 제가 중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은 세 분, 진화위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그리고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임을 다시 한번 명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음 7월 2일 중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화위에 대한 업무보고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진화위에 관련된 상임위원과 또 관련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나와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많은 국무위원분들께서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데 그래도 사무총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이러스토털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선관위가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정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원 3000명의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번 선관위의 보안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적이 많아서 보안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 선관위 체제가 선관위의 고유 직원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외협력업체와 협의해서 정보보안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좀 강하게 해서, 해킹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작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특별보안교육을 시행했었는데 이번에도 유지보수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위규사항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저희 보안규정에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는 지금 해당 협력업체 직원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생하는 그런 조치, 회사 내부적인 정계도 고려를 했고 재발방지계획에 대해서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안규정 위반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금년도에 위원회 인터넷망 PC의 문서를 암호화하고 외부 유출 시 열람 불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DRM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구축해서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총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읽어 주셨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모경종 위원 누가 정보관리책임자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법률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모경종 위원 법률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총집행은 사무총장입니다.

○ 모경종 위원 사무총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 모경종 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사실상 고해성사처럼 줄줄줄 말씀해 주셨는데 선관위는 정말 가장 필요한 지점이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해킹이나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야말로 공정성에 많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요소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관리를 하시는 담당자가 보안이나 본인의, 우리 직원이 되었건 아니면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가 되었건 그 내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임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줬다? 그거야말로 다시 한번 또 위험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최고정보관리책임관 등을 도입하시고 전문가를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족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서 매년 2만 건 이상의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 이 과정에 대해서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고 그리고 사무총장님이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 자세와 함께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선거참관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모경종 위원 지금 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하신 것에 따르면 투표소 한 곳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을 했다고 해요. 지금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해서 비례후보를 낸 정당이 38개에나 달하는데 참관인 자체가 선거장에 직접 가서 본인들의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관 자체를 못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 전, 4월 10일 국선 전에 검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에 참관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참관인이,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끔 내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전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신청인원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와 함께, 많은 부분을 국회와 함께 손발 맞춰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인사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해 주신 내용대로 잘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구당 부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입장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마지막 발언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전에도 3회에 걸쳐서 개정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정당 민주화와 회계 투명성 방안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같이, 제도적으로는 정당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좀 잠깐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모경종 위원께서 해킹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KBS 보도가 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지금 직원 3000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한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 이게 이번에 KBS 보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지금 처음 있었던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건은 처음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박정현 위원**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보 보안 부분 사고는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보 보안 지침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내부망에 있는 것, 외부망에서 작업한 그 파일을 내부망으로 업로드할 때 혹시 해킹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을 충실히 잘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박정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시킨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작년 5월에도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에 따른 보안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해커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크웹에 선관위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의 사안은 해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킹에 대한 보안 업무 담당자의 매뉴얼도 전부 바꿔서 내부 보호망을 하도록 운영 규정 자체를 강화했고요. 이번 사태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담당자가 해킹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탐지를 하는 그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100% 그런 위험성을 제거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28쪽에서 29쪽까지가 보안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전문성 강화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DRM 시스템을 도입해서 빨리 구축해서 우리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아예 문서 자체를 읽지 못하도록 그러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보호과, 이것 관련해서 정보보호과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인원은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있지만 종전 보안 인력 3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13억에서 육십몇 억 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돼서 보안 업무 역량은 굉장히 강화된 게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강화됐는데 이렇게 됐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보 작업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언론에 몇 개 나온 것을 보면 강청희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전지역이었는데 선거공보물이 누락돼서 발송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특정 후보 공보물이 누락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선관위에서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까. 그리고 김해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한 후보는 누락됐고 다른 후보의 공보물이 두 부나 더 발송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그런데 이게 이번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과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실질적인 공보물 발송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점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잘못……

○**박정현 위원** 공보물……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공보물 발송 업무를,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교육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대개 관변단체 회원들이 동원돼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선관위나 해당 자자체에서는 공보물 작업을 할 사람들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미리미리 공보물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해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동일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해 왔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고 실제로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님 지금 고견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작년에 발생했던 선관위의 대대적 인사 채용 비리 사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에서 어떠한 대책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보면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 장치로 감사2과를 신설한다,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해서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중앙선관위의 민낯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시된 경력 채용이 백육십칠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전수조사했는데 모든 절차에서 인사 규정 위반이 발생했어요. 위반 건수가 800건에 달했습니다. 밝힌 사례를 보면 평정표를 조작한다, 면접 점수를 조작한다, 순위를 조작한다, 비공개 채용 등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거 조작,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조작, 채용 부정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채용 비리가 최초에 발생했던 게 5월 초였는데 그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선관위가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 해서 했어요. 한 결과가 뭐였나?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4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4명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확인하니까 353건을 적발했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났지요, 4건에서. 다시 감사원에서 이걸 800건을 적발했습니다. 27명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게 선관위의 특별감사로 끝났더라면 이런 전관적인 비리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선관위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채용 비리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어요. 2019년·2022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받았던 내용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위촉했고 위촉된 시험위원 대다수가 응시자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준과 다른 서류전형 심사를 해서 합격자와 불합격까지 뒤바뀐 일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2과를 신설하시고 외부위원 100% 했는데 이게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자체 특별감사로 했던 게 4명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2과를 신설한다, 외부위원으로 100% 위촉한다 했는데 이게 과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감사관을 최초로 위촉했는데 그 이후로 채용이 있었는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일단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감사권이 원래는 인사과에 있었고 감사 부서도 사무총장, 사무처에 있었던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조직도를 보셨겠지만 위원회 산하로 감사관실을 옮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감사관을,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1월 1일 자로 지금 뒤에 있는 임정수 감사관을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도 조직돼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회의 마쳤고 이번 상반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해서 감사결과보고서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도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양부남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선관위에서는 작년 7월인가 권한쟁의심판 했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양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지만, 과연 그러한 이론을 떠나서 선관위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만큼 자격이 있었는가, 국민 앞에. 제가 선관위의 직무감찰이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요, 이것은 여러 이론이 있으니까. 선관위 스스로가 직무감찰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만큼 국민한테 떳떳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 언론을 보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휴직을 한다, 선거 때가 되면 휴직을 했다 할지라도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거철만 되면 휴직을 한다, 그 공간을 빼꾸기 위해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경력직 직원에는 지자체에서 충원이 된다,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데 왜 일할 시기가 됐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휴직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 겁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의 필요성은 반드시, 그 부분도 저희 조직으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단순히 내부감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 양부남 위원 아니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말고요. 왜 선거철 때만 되면 직원들이 휴직을 하냐고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육아휴직과 맞물려……

○ 양부남 위원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 휴직을 한 직원도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선관위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닙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 양부남 위원 선거철만 되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시기에 휴직을 하냐 이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선관위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그걸 바로잡을 방법은 뭡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강제적으로 휴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양부남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선관위에서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지금……

○ 양부남 위원 직무감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쟁의심판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력직 직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비다수인 경력직 채용은 폐지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경력직 직원 채용이 선관위 인사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폐지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무튼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또 전반적인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일할 때 휴직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5월 이십여칠날 인사 제도·조직 개선 TF팀을 지금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저희 선관위 조직개편이나 인사규정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식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지역구와 달리 여러 가지 운동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자체가 지역구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이 주된 것이고 그 대신 비례대표는 그 지역구보다는 국민 전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소위 정당 활동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정당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스템이라서 굳이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개별적인 선거운동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당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고려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정춘생 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꼬이시는 것 보면 그 제도를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현재 제도가. 연설·대담 안 됩니다. 마이크 사용 안 됩니다. 유통도 안 됩니다. 대신 돈이 많이 드는 신문·방송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 취지의 성격상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춘생 위원** 선거운동이 입은 최대한 열고 돈은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비례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방식은 입은 최대한 막고 돈을 최대한 쓰라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이른바 9무 운동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잘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까 연관된 얘기인데요.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연설·대담,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모두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은 논의할 충분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과연 제한적 요소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하나도 안 고쳐지고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소에는 집회도 되고 마이크 사용도 되는데 왜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최대한 알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법이 반대로 후보를 최대한 알리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정춘생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조만간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의식도 담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준연동형을 통해 독자성을 갖추게 된 만큼 비례대표 선거의 성격이나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조국혁신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는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혁신당과 같은 다양한 정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원내 교섭정당의 경우에 50%를 배분하고 그 이후에는 교섭정당이 아닌 의원 수 5명 이상을 가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씩 배분하고 그다음에 원내 의석이 없거나 그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씩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그 잔 부분을 의원 정족수와 투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사무총장님 생각에도 너무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률 개정 의견을 종전에 낸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2021년도 선관위에서도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보조금 배분 방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내 교섭정당에게 우선권을 줘서 배분하는 방식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난 2017년 9월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관위가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정당에 보조금 50%를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나름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에서 정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선관위에서도 합당한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은 거대 양당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의부 빈의빈 제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나오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선거공보 발송, 2400만여 세대에 발송을 했는데요,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6만 세대밖에 발송을 안 했어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은 후보자가 저희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어서 일단 줘야만이 저희가 그 부분을 발송하도록 법률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결국은 후보자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데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지 않아서……

○위성곤 위원 후보자들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이런 문제도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선거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부

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선거공보를 작성해서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저희 선관위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선거 참정권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그 장애로 인해서 선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자꾸 저희들이 개발해 가면서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진 우리 선관위 비리, 채용 비리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상황을 보면 자정능력도 없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신뢰도 없어버린 상황인데 실제 대안은 자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보았습니까?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부 감사, 외부 통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 위상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권한쟁의도 그런 의미에서, 즉 행정부의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국회나 대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동일한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 정당 관계, 즉 국회의원님들의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무감찰의 형태로 그 모든 것이 감사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선관위에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겠다,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반영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원수는 적지만 감사관을 분리해서 감사관 감사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감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결국 헌법기관을 외부 통제하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관계 법률에서 지금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관을 감사하고 계시지만 반기별로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결과,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법률적으로 상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휴직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까, 선거철 되면 통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양대 선거 때 약 200명 정도가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휴직을 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평소의 한 두 배 정도……

○ **위성곤 위원** 갑절 정도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10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로 지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성곤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위성곤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총장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가관이나 우리 직원들의……

○ **위성곤 위원** 제일 바쁠 때 일 안 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법률상 여러 가지 휴직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토대로 여러 가지 법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성곤 위원** 그런 제도들이 악용되지 않게끔 방안을 좀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위성곤 위원** 이번 선거 때 대파,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대파였는데 대파를 소지, 투표장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랬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기본적으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게 의도적으로 선거장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왔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표현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표장 외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투표장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성곤 위원** 아니, 대파가 어떻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 **위성곤 위원** 그러면 대파를 들고 가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로 내가 대파를 들고 가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파를 들고 가서 투표를 하고 싶다,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 **위성곤 위원** 저는 그러한 선관위의 결정이 사실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질의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투표소 안에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대파가 아니어도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내 의사 표현을 정치적으로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그러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면 파란색은 정치적 상징 색깔인데 그것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의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거 복장……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이 논의될 성질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벗고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

문제는 파란색 복장이나 빨간색 복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퍼포먼스냐 아니냐의 해석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정치적 목적……

○**위성곤 위원**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 일부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선관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은 어떤 선거인들도 투표소 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막은 것이다. 대파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충북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총장님, 공직선거법 제1조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 등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공직선거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는 처벌 대상을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받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광희 위원** 맞겠지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를 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데……

○ **이광희 위원** 대통령은 위반이 되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잠깐……

지금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은 일단 후보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자라는 개념은 당해 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후보자, 당해 선거가 뭔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요, 포함되는데 지금 문제는 당해 선거가 국회의원선거 아닙니까?

○ **이광희 위원** 포함되는데 그 포함되는 배우자가 이렇게 기부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이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명품백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 아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는 전부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도 공직자니까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고 지금 기부행위……

○ **이광희 위원** 예,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건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때……

○ **이광희 위원** 그 해석을 왜 대통령만 어긋나게 해서 해석을 하시냐는 거예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해 선거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선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니까……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소관 법인 공직선거법 제117조, 257조 조항과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으신 거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게 아예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를 할 때 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러면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건 청렴금지나 뭐 해서 청탁금지, 방지법이 나……

○이광희 위원 선거법에 위반 안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당해 선거의 후보자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선관위는 그런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부인이 그런 뇌물을 받았을 때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당해 선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광희 위원 당해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조문 자체가……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쪽만 그렇게 관대하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스물네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광희 위원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여당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민생토론회 발표자료를 여당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을 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은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논지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혼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단체장조차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를 삼아 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객관화시켜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항이 어떤 사안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행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누차 걱정해 주시는 선거 중립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총장님, 그러면 대통령 민생토론회 내용하고 여당 후보 공약하고 비교 한번 해 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의 비슷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중지나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내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거냐, 이게 선거운동 관여로 볼 거냐의 부분은 전반적인 대통령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선거 시기도 맞물려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정도 가지고는……

○ 이광희 위원 안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종전 사례에 비해서 다를 게 없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정도 해도 된다? 그렇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 건의……

○ 이광희 위원 총선이나 이때 가서 그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쪽 해당 당과 관련돼서 공약을 막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지금……

○ 이광희 위원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잘 말씀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도……

○ 이광희 위원 지금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고발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은 일단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지금 저희들은 손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게 그 해석도 안 하고 이렇게 넘긴 거는, 선관위에서 해석하지 않았던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 이광희 위원 이게 명백한 위반사항이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조사나 수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진행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광희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이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음 총선 때 전부 이렇게 공약, 옆에서 발표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다시 서면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이 막 입에서 간질간질하는데 좀 참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안 나오셨는데 선관위에서는 나오셨어요. 이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의 정쟁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곳의 사전투표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거 총장님,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이게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동영상이 촬영돼 가지고 유포됐다 하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어디서 누가 이렇게 발견한 겁니까? 선관위 직원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선관위 직원이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발견했다 하면 선관위에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그 부분이, 이 투표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 업무 분장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국에 한 삼천몇백 개 있는 사전투표소에 선관위하고 행안부가 미리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사전 점검을 받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또 할 텐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 주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의 행안위 속기록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김용빈 총장님 저번에, 작년 10월 기관보고에도 계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그때 권성동 위원님하고 문답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약하다’—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했습니다—‘그래서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보안관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보안관제요?

○이상식 위원 국정원의 보안관제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마 법정부 그 망을 의미하시는……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는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마 그 대신 해 가지고 보안관제시스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 총장님이 기억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때 논의가 된 것이 왜 이걸 받았느냐, 누가 의뢰를 한 거냐 이거 가지고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그건 보안컨설팅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보안컨설팅 그 부분이 왜 그 보안컨설팅을 받게 됐느냐의 앞의 부분이 저희들 기관이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 보안관제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컨설팅이나 다름없다 이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그 컨설팅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정원에……

○이상식 위원 총장님,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국정원의 보안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러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용어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해킹 문제가 좀 많이 되니까……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관제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따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지금 기관보고를 보니까 거기의 핵심 추진사항 1번으로 투표율 제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권자 투표율 제고, 1번으로 나와 있는데 투표율을 올리

려면……

총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의 투표율을 제고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맥락은 그렇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스타 음바페 아시지요? 음바페가—6월 16일 날 나와 있습니다—‘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기회를 갖고 있으니 모든 젊은이가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내세웠으면 젊은 층의 투표율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추진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추진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선거 연령이 낮아져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추진하는 얘기는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새내기 유권자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서……

○**이상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새내기만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 취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 반드시 선거 교육에 대한 일정이 들어가서 이수를 해야 되고……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면 투표율 제고 방안,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젊은 층이 포함된 자세한 투표율 제고 방안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외부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을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외부 인원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가 없었고 전부 다 내부 위원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감사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감사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감사관을 외부에서 충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도 처음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도 처음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다른 정부기관, 가령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벌써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 전부터 외부에서 감사관을 충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헌법기관이고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올 초에야 겨우 감사관이 새로 외부에서 충원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직에서는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테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 과연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이상식 위원** 이제 감안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믿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감사관님, 임정수 감사관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김용빈 총장님께서 감사관님을 특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목해 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표 어떤 그런 주자로 감사관님을 내세워 주셨는데, 지금 감사관님 오신 지 한 6개월가량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 임정수**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보니까 전보다 선관위의 어떤 청렴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 임정수** 글쎄, 제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제가 홍보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외부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애 요인은 지금까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방통위가 있고 방심위가 있고 선방위가 있는데 아시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8조의2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방위가 보니까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어지면서 2인 체제로, 말하자면 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고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범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악명이 높다고 할 정도로 과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5개월 동안 앞서서 열아홉 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MBC 20

건을 포함해서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법정 제재 중에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제재의 경우에는 14건 중에 11건이 MBC예요. 이게 과연 정치적인 중립, 선거 사무에 있어서의 선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소속 기관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페이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왜 선방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방심위 이런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사무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을 해칠 소지가 있어서 저는 법적으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입법정책적인 결정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이해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방송업자 그다음에 신문업자 그다음에 인터넷사업자 이렇게 대상을 구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과연 그 부분을 통합할 건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특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든 이번 총선에서 정말 선거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남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 그리고 선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고 있는 입법 체계다 이렇게 보여져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행하셨던…… 지난 4월 달인가요? 사무총장님께서 선거 끝난 이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강천석 논설위원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 선관위원장이 우려 성명을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성명을 내려면 중앙선관위원 9명의 의결이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의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안건에 올릴지 올리지 않을지를 토론했다’라고 하는 대답인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정식 안건이 아니라 자유토론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해식 위원** 그러면 정식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 그냥 총장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 그야말로 ‘보였다’……

○**이해식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유토론 과정에서 올리지 않기로 정리됐다', 이 말은 공식 회의가 끝나고? 아니면 공식 회의석상에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자유스럽게 그냥 얘기하는 과정에서……

○ 이해식 위원 그러면 아홉 분 위원님들이 거의 다 있는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이해식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옮겨서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조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해식 위원 그런데 어떻든 대응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결국은 안 했습니다.

○ 이해식 위원 그러면 이 인터뷰 기사도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같습니다.

○ 이해식 위원 어떻든 중앙선관위가 말이지요 과거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 현장 방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아까 이 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언론에도 굉장히 오르내렸는데 중앙선관위는 그냥 회피해 버렸어요.

총장님께서는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라고 보세요? 이게 직무유기라고 하는 어떤 법적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회피하고 지나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위법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예를 들어서 위법한 문제,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할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정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 이해식 위원 아니, 선관위가 분명히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충분히 토론했을 법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안 한 건 맞습니다.

○ 이해식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돼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시기나 기타 장소 여러 가지를 다 따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넓혀 놓으면 대통령의 활동이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언동에 대한 부분이 만약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선거 시기에 즈음해서 대통령의 언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사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똑같은 선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는 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중립적으로 어떤 의사판단을 정확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시라면……

○**이해식 위원** 의사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고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정도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구갑 채현일입니다.

오늘 많은 기관장들이 회의에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전에 차떼기,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으로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원칙적으로 협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 기관이 되고 또 권력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최근에 그런 채용비리 등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협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선관위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공직선거법 58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68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누구든지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헌법불합치를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90조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했습니다.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일단 제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선거법이 개정됐는데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 헌법재판소도 그런 취지입니다. 과거에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만 선거법을 모르면 선거법 전문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선거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선거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에 전화하고 물어보고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 사무국장도 답을 못 하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이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있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때 가지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예를 들어서 68조 같은 경우는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90조 같은 경우도 180일에서 120일로 해 가지고 기간만 축소했다는 그런 축소에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건건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선관위 간부님들, 임원님들한테 얘기해도요 모른다고 답변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력 낭비 또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선거법을, 지금의 건건이 해 가지고 숲이 아니라 나무,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개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예외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경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개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채현일 위원** 아마 21대 국회 때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안들이 제안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지난번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 과정, 개표 과정 현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 당시 남영희 후보 측에서 투표함 참관은 못 했고 후보자 측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숫자가 많이 차이 났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맞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제7장 개표관리에 보면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함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 절차대로 진행됐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절차대로 진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때 개표소 상황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줄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올라오면 동별로 차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인별로 이렇게 죽 들어가니까 여기 참관인이 옆의 참관인,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 있는 참관인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혼재돼서 투표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해당 참관인들이 그 투표함은 못 봤다고 그리고 다른 당에 있는 참관인은 ‘내가 그것 봤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와서…… 저희 사실관계 조사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 후보 측 개표참관인이 관외 사전투표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의의를 제기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관위에서의 이런 조치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투표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없다고 나왔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보면,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제7장 개표관리 4조에 개표상황표 서식에 따라서 공표한다고 규정이 엄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봤는데 현장에서는 육성 공표도 없었고 개표상황표 게시도 생략되었다고 현장에서 다, 모든…… 아마 선관위도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개표소 내에 집계상황표만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 채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원래 게시되는 개표상황표하고 달리 개표집계표가 게시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점 과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최전선에 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마저 절차적으로,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엄청 많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와 후보자한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그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아까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고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반갑습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또 우리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났는데, 상당히 지났는데 총선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면 제일 걱정했던 게 매 선거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런 게 확대되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후에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이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에는 역대 선거에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막, 정치권에 나서서 선거를 부정,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는 이런 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제가 좀 논의를 해 보니까 선거 과정을 좀 시연하는 이걸 과거보다 많이 확대했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참고해서 계속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11페이지에도 참관인·정당추천위원 참여도 보장하고 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투·개표 상황 실시간 제공 등 모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런 게 좀 덜했다고 자평하시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21대 국회의원선거하고 지금 22대하고는 선거소송 숫자가 확 줄었으니까요.

○**한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분석을 해서…… 결과 이후에 승복하지 않는 이게 계속 확대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총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니까,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요. ‘선거여론조사, 심의·모니터링 강화’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결과가 매 선거마다 다른데, 어떤 선거에서는 여론의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론조사 이건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업무보고 보니까 ‘시도 직원 등 대상 교육 및 유기적 협력으로 심의·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를 해서 전문성 제고 및 수시 실태점검을 한다’ 그리고 ‘왜곡·조작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 해서 엄중 조치를 한다’.

이 왜곡·조작에 대해서 결과를 판단한 다음에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아마 총장님보다도 뒤에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모니터링 강화요?

○**한병도 위원** 잠깐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강화하고, 뭐 등록요건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강화라는 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려면 저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혹시나 여론의 추이와 좀 다르거나 등락 폭이 좀 심하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거기에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다 여론조사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또 그걸 분석하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를 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린 자료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한병도 위원** 중대범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연령을 속이거나, 특히 당내 경선 때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요. 연령을 속이거나 성별을 속인다든가 아래 가지고 표본집단의 비율을 좀 조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데이터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만 보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보면서 제 느낌은 이 여론조사가 아주 과학적이고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를 받으면 ARS와 면접 기준은 조사 데이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질문 항목을 어느 항목을 먼저 넣느냐와…… 예를 들어 정당 지지도를 따질 때 항목을 위에 넣는지 뒤에 넣는지, 이런 결과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 ARS 비율을, 유선 면접 비율을 몇 %로 했는지에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과 주말, 휴가철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나오는 어떤 큰 편차 이런 것만 보고 파악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결과치를 놓고 아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결과치에 대해서 필요한 목표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게 있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고도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언론사별 이걸 다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도 보수지, 진보지가 있듯이 여론조사기관도 그런 특이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나 그런 방식을 고집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선관위에서도 이제 좀 더, 아주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표를 할 때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기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 시기의 문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건 맞는지,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막 발표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것과 관련된 좀 더 전문가들이…… 총장님, 이것과 관련된 좀 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고. 이것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너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플러스 어떤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우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1차 질문으로 이번에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문, 보충질문 시간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양부남 위원님, 그리고 또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이해식 위원 2차 질문……

○위원장 신정훈 2차 질문.

○이해식 위원 아, 2차 질문을 한다고요?

○위원장 신정훈 원래는 2차 질문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 우리가 지금 첫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면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이해식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그러면 2차 질문은 각자의 처지가 있으니까 한 3분 내에서……

○양부남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부남 위원님 그리고 정춘생 위원님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 세 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제가 조금 전 질의 때 선거철만 되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통계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 달에서 3개월 전에 사직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3개월 전부터……

○**양부남 위원** 1~3개월 전 휴직한 숫자와 같은 기간 동안에 선거 없던 철에 휴직한 숫자를 제가 비교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입니다.

총장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동의하시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기본적으로 지구당이면 시군구 지구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선거구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선거구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지구당이 제대로 가동을 해야만 국민의 의사 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부분이 이게 사당화 내지는 불법정치자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혹시 6월 17일 내일신문 기사를 보셨습니까? 국민의 46%가 반대의견이고요 찬성은 20%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이면에는 후원금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하고 후원금 모집의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일 겁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지역 위원장이 아닌 원외 정치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지, 현재 정치인들 아니면 유력인사들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선불리 찬성한다 하지 마시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것을 폐지했던 배경,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면 부활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것을 면밀한 검토 하시고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조건부로 제가 동의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회의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 총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유권자 의식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에 종합의견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5월 20일 날 우리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했지요. 그 결과를 보니까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있었다에 74.9%, 투표할 수가 없었다,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25.1%나 됐어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된다가 93%, 그리고 사전투표제도의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현행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 73.6%, 사전투표제도 확대 16.4%, 그래서 무려 90%가 유지하거나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각국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 또는 기념품을 준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전투표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운영하는 것, 그렇게 되면 굉장히 투표율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가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금년이, 2014년이니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 이해식 위원 10년 정도 됐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꾸 제기를하면서, 공교롭게도 저도 지금 외우고 있네요. 63 대 36이라는 그 기가 막힌 수치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결국은 국민이 믿어 주지 않는 제도는 실패하는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데이터자료 그리고 아까 한 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론조사 값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이번에 연구사업 일환으로 넣어서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관계법의, 투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뭔가 정리하는 데 의견을 받아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해식 위원 그래서 사전투표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다 열어 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질의, 보충질의가 다 마무리됐는데요.

마치기 전에 사회자인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무총장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대단히 아쉽고 또 위험스러운 답변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사례로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사실 공권력에 의한 노골적 선거개입, 이번에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시기적 주제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런 관계들을 보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선관위가 취해 왔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무총장께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시기와 내용을 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의 판례처럼 우리 선관위는 늘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사례로서 허용되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향후에, 지금 현직 공무원에 대해 할 수 없는 사례가 거의 무너지는, 허용되어야 될 그런 사례로 지금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무력화될 위험성이 있다 저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권익위의 최종 결과 발표는 청탁금지법을 거의 무력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발표였다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나 또 이해식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계속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험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의 사례를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의한 선거법 개입으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어떤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허용되는 사례인지, 어떤 부분에서 위험스러운 사례인지 사례로서 좀 분석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고 또 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좀 그렇게 분석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못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조상, 지금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서 결국 수사 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신정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이와 같은 모든 사건에서 사실은 선관위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법원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한 의견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업무처리 형태를 보면 저희들이 수사와 조사가 같이 행해질 경우에 수사……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더 진전되어도, 제가 필요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다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저희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신정훈 최대한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있으면 되고 되는 것으로 됐으면 어떤 식인지 한번 사례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시기와 내용을 구분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오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구당 부활로만 이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2021년도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면서 생활정치 활성화라는 취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1번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당화 방지, 세 번째로는 회계투명성 확보 이런 취지를 담아서 이야기했고 이번에 김영배 위원님 역시 당원 민주주의 강화 또 시민의 정치참여 확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당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굉장히 좁다. 실제로 지금 선거법이, 정당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에 관련돼 있는 개정 방향이 시민들과 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정당 활동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원론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희석시킬 내용들을, 제도를 감안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인적 그런 어려움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서 거기 사무까지 지금 편중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 시군구 지구당까지 부활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과연 그 제도를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열어 놓고 종전에 의견을 제시했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과중한 인센티브랄까 또 사당화의 문제를 우려하시는 데 대한 방지책 이건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정치활동,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구당만 부활되면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 제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경험했는데요. 당원들이 낸 당비조차도 과도한 규제, 과도한 정당법의 규제, 선거 관련법의 규제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당비 자체가 도당에 다 쌓여 있습니다. 50억씩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편협하게 정당활동을 규제하면…… 돈 안 드는 정당활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플래카드 전쟁만 유발하고 있다, 플래카드가 아닌 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교육활동 그리고 당원들의 훈련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에 대한 것을 함께 포함해서 원래의 취지가 좀 살려질 수 있도록 내용의 방향을 잡고 나중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채현일 위원님 그리고 정춘생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또 이상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7월 2일에 열어 오늘 불출석한 기관과 또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8인)

성명	직위	출석요구 일시	신문요지	요구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024. 7. 2.(화) 10:00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실시	윤건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김조일	소방청차장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1국장			

○출석 위원(14인)

김성희 모경종 박정현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옥남

사무처장 송상교

조사1국장 황인수

조사2국장 정영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정책실장 신광호

감사관 임정수

대변인 조동진

기획국장 김인수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선거1국장 윤재수

선거2국장 황윤선

법제국장 김범진

조사국장 최희영

선거연수원

원장 김대일